



주간통일정세 2011-19(2011.05.02~05.0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일본인 2명 억류, 1명 추방"(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마약과 위조화폐 혐의로 일본인 2명을 억류하고 1명을 추방했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지난 3월14일 라선시에 들어온 일본인들인 전 JP다이린주식회사 대표취체역 후루야 마사끼, 일본 리아라이즈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아베 히데히꼬, 일본 스기다공업주식회사 전무 히로오카 다쿠미가 마약, 위조화폐 범죄로 해당 기관에 억류됐다"며 "그들이 범죄행위와 엄중성을 인정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후루야씨는 북한에서 추방됐고 나머지 2명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공화국 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그에 따르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함.

● 北 김정일·정은, 軍종합체육관 개관식 참석(5/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종합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개막식 참석에 이어 개관경기를 관람하고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며 중앙통신은 전함.
-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개관사를 통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향해 온 나라가 내달리는 시대의 숨결에 발맞춰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여 모든 체육종목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이날 개관식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김정희 당 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 당 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명국 군 작전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최부일 군 부총참모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박명철 체육상 등이 수행했다며 중앙통신은 보도



● 北조평통, 南 인권거론에 "징벌할 것"(5/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핵참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반통일 집단으로서 정체만 더욱 드러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 "北호위사령부 요원 베이징 체류" 보도(5/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전담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요원들로 보이는 북한 인사들이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아직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체적인 방중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또한 연합뉴스는 국내의 한 신문을 인용해 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호위사령부 요원들로 추정되는 북한 인사 20여명이 4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함.
- 이어 이 신문은 이들이 북한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확실하다면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 부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선발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
-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측의 초청이 유효하고 방중을 위한 조건도 형성돼 있어 김 부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의 판단에 따라 어느 때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태"라며 "방중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 또한 연합뉴스는 구체적인 방중 시기를 놓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최근 '4월말 5월초' 방문이 유력하게 부상했던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시 북한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6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

● 北김정일, 평양시 경공업공장 현지지도(5/6,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방직공장 등 평양 시내 경공업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 위원장은 평양방직공장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노동자들이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낙랑봉화피복공장을 방문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능수준을 높여 옷 가공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이어 봉화비누공장을 시찰하고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앙방송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수지연필공장을 방문해 생산품과 생산시설을 살펴 보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은 질이 좋은 수지연필과 색연필을 더 많이 요구하는 만큼 날로 늘어나는 필기도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맡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이날 김기남 · 태종수 · 문경덕 당비서,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일 남흥청년화학 시찰...비료생산 독려(5/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 석유화학공장인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비료생산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남흥의 노동계급은 나프타에 의한 비료생산 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에 흔한 무연탄으로 비료를 다량생산 해냈다"며 "김정일 동지께서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사회주의 협동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
- 중앙통신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무연탄으로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나프타로 비료를 생산할 때보다 생산원가는 크게 줄이고 생산량은 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
- 시찰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태종수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홍인범 평안남도 책임비서가 동행
- 이에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생산을 독려한 것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정치)

- 北노동당대표단-루마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 5.2 평양에서회담진행 (5/2, 중통·중방)
- 김일성의 조국통일3대원칙 발표(1972.5.3) 39돌 즈음 김일성 父子의 조국 통일운동 업적 선전 및 "△駐韓美軍철수, △韓-美합동군사연습 중단, △同원칙과 남북공동선언 관철 투쟁" 선동(5/3, 중통 · 민주조선)
-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위해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주장과 "△주권존중, △反帝투쟁, △사대주의 不許, △자위적 국방력 강화, △불력불가담운동 및 남남협조" 강조(5/4, 중통 · 노동신문)



나. 경제

● "생명선 지켜라" 北 식량증산 연일 독려(5/2, 연합뉴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는 올해 농업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강조한 북한이 모내기철을 앞두고 식량증산을 연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황남은 보란 듯이 일어섰다'는 정론을 통해 대표적 곡창지역인 황해남도를 거론하며 "강성대국의 풍년가을을 향해 천만군민 힘차게 돌진하자"고 촉구
- 신문은 "우리 마음에 농립모를 같이 쓰고 같이 씨레치기를 하고 같이 모내기를 하고 함께 김매기를 하면서 농업전선의 사계절과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민뿐만 아니라 북한주민 전체에게 농업지원을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농업 근로자들이 벼 모판 씨뿌리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며 "전국적인 벼 모판 씨뿌리기 실적은 22일 현재 75% 계산을 넘어섰다"고 전함.
- 또한 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는 농업전선의 비약적 발전에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가스화 대상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해 현대화하는 문제, 연관단위들에서 원료와 동력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 비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고 전함.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성대국의 해'로 정한 2012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난을 주민 동원으로 풀어보겠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며, 북한의 이 같은 자구 노력에도 식량증산에 필수적인 비료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WFP 식량분배 감시 北시장서도 가능"(5/3,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긴급식량지원 개시를 앞두고 분배 감시를 위해 상주 국제요원을 기존 10명에서 5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방송은 WFP의 긴급식량지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상주하게 된 국제요원 59명 중 12명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며 "인력의 60% 이상을 분배현장 감시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함.
- WFP는 "매달 북한 내 400여개 지역에서 WFP 소속 국제요원이 현장 실사를 하는 것에 북한당국과 합의했다"며 "실사에 대한 사전통고 기간은 기존 일주일에서 24시간으로 줄었고 도·군 단위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힘.
- WFP는 앞으로 12개월간 약 350만 명의 북한주민에게 31만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北-中 라선특구 고리삼아 경험 '쟁걸음'(5/4,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고리로 삼은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내달 본격화하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교통망 추가 확충과 물류 교류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훈춘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말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을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날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3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 정부 간부들도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향후 5년간 35억 달러를 들여 라선특구 부도와 도로, 정유시설, 가공단지 등을 합작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황철남 라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지린(吉林)성을 방문한 데 이어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같은 달 연변과 북한의 라선, 청진을 잇달아 방문, 경험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근 들어 라선특구 개발을 위한 북·중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이어 북한도 5성급 호텔과 골프장, 현대식 대규모 시장 건설 등 라선특구를 국제 자유무역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 최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중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도

● 1분기 北中교역 2배로 급증...10억 달러 육박(5/4, 미국의소리(VOA))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급증해 전년 동기의 배로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VOA는 한국무역협회가 중국해관통계를 종합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3월 북중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인 9억7천2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분기 4억8천6백만 달러의 배로 늘어났다고 전함.
- 1분기 북한의 수출액은 4억134만 달러로 작년 동기(1억2천700만 달러)보다 218%나 급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매월 100% 이상 급증세가 이어져왔으며,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5억7천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3억5천900만 달러)보다 5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무역수지는 1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보도

● WFP, 자금 부족으로 대북식량지원 지연(5/5,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긴급식량지원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나나 스카우 WFP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발표한 (대북 긴급) 식량배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32만t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한 곡물은 영양강화과자를 만들 8천t밖에 없는 만큼 일단 자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



- 스카우 대변인은 "새로운 긴급지원사업 발표가 당장 식량을 배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기금 확보를 위해 긴급지원사업의 명세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
- RFA는 이어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해 "WFP의 새로운 식량지원발표는 미국의 지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WFP가 지원한다는 곡물 31만t은 2008년과 2009년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려던 50만t 중 이미 지원한 17만t의 곡물을 제외한 33만t을 연상 시킨다"고 덧붙였다.

● "춘궁기 北 쌀값 급등, 달러환율도 올라"(5/6, 자유아시아방송(RFA); 데일리NK)

-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식량가격이 날로 올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4월에 kg당 1천500원에 거래되던 쌀값이 5월 들어 1천900~2천원으로 급등했다고 전함.
- 데일리NK도 지난 3일 "춘궁기 식량수요가 증가하면서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쌀값이 평양에서는 kg당 1천800원, 신의주와 혜산에서는 1천900원과 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
- 이처럼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봄철 들어 쌀 비축량이 줄어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쌀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RFA는 분석
- 이 방송은 세계적으로 약세인 미국 달러화의 경우 외화 암시장에서 1달러가 3천원에 거래되던 4월 초보다 150원 가량 오른 3천150원에 거래되는 등 북한 원화 대비 달러, 위안화 환율도 많이 올랐다고 전함.

● 中룡징-北칠보산 관광코스 개통北·中·러 순회 무비자여행 첫 합의(5/6,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에서 북한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됐다고 연변일보가 보도
- 룡징에서 산허(三合)통상구를 거쳐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을 둘러보는 이 관광코스는 '변경(邊境)관광'으로 분류돼 비자 없이 통행증 발급만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룡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기대
- 훈춘(琿春)에서 북한 라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순회하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룡징-칠보산 관광이 개통됨에 따라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함.
-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4년 만에 해제,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했으며 이에 맞춰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3월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코스와 옌지(延吉)-훈춘(琿春)-팡촨(防川)-라진·청진 코스 신설을 추진하는 내



용을 담은 '동북지구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

- "北 대중국 광물수출 8년 사이 17배 ↑"(5/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물자원이 2002년 약 5천만 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17배(8억6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RFA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북한자원연구소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파악했으며,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1~3위는 모두 광물자원이 차지했다고 보도
 - 올해 1.4분기에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팔아 벌어들인 금액은 1억5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8만 달러보다 15배나 됐으며, 올해 3개월 동안 석탄수출액은 작년 석탄수출액(3억8천600만 달러)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RFA는 설명

■ 기타 (대내 경제)

- 김영남 · 최영림 · 양형섭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내각 · 성 · 중앙기관 · 당 · 정권기관 일꾼 등, 5.1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축하 방문 등 노동자들과 「5.1절」 기념(5/1, 중통 · 중방)
- 北 각지 농촌들, 모내기 기계 수리정비 사업 4월30일 현재 100% 완료(5/2, 중방)
- 平南 · 平北道 등 각지 전문약초재배 단위들, 약초씨뿌리기와 약초모관리에서 성과 이룩(5/3, 중통)

다. 사회·문화

- "北에선 5월5일 몰라요"...6월이 어린이달'(5/4, 연합뉴스)
 - 북한에서는 어린이날 대신 6월1일 '국제아동절'을 기념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어 뉴스는 '국제아동절'은 1949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주의 명절로 북한에서 국제아동절은 탁아소나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날로 각지 탁아소,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보도
 - 또한 2006년 6·15 남북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5월5일에 남북한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을 때 북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은 이러한 남북 간의 문화차이 때문이었다고 보도
- 北 "中관광단, 두만강 · 라선 등 둘러봐"(5/4,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중국인 관광단이 지난달 29~30일 북한의 두만강과 나선시 일대의 역사유적 및 관광지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최근 중국관광단 성원들이 조선의 일부 지역을 참관했다"며 "이번 참관사업은 조선(북), 중국, 러시아 3국 윤환선관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밝히며, "라진항을 비롯한 경제대상들도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 신화통신은 지난달 27일 훈춘산장(琿春三疆)국제여행사가 인솔하는 21명의 단체여행객이 26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출발해 무비자로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하고 4일 창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

● 北TV, 中드라마 잇달아 방영(5/6,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최근 북한에서 중국 TV 드라마가 잇달아 방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북한의 조선중앙(CC)TV는 최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조명하는 드라마를 연속 3차례 방영했으며, 조선중앙TV는 지난해 8월 '외국영화' 코너를 통해 이소룡의 스승이자 중국의 전설적인 무술 영웅인 엽문의 일생을 다룬 홍콩 액션 영화 '엽문'을 우리말 더빙으로 방영
- 조선중앙TV는 2004년 5월 고전드라마 '홍루몽'을 내보냈고 문화대혁명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갈망'과 중국 영화 '따뜻한 봄(暖春)'을 방영한 적이 있지만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중국 드라마들을 잇달아 방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찾아진 북-중 양국 간 문화교류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보도

● "태국 불법입국 탈북자 6년 만에 53배"(5/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을 떠난 뒤 중간경유지인 태국에 불법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지난해에만 약 2천500명에 달해 6년 만에 50배 넘게 늘어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태국신문 방콕포스트를 인용해 북한을 탈출하고 나서 중국이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불법입국 했다가 체포된 탈북자가 2004년 46명에서 지난해 2천482명으로 늘었다고 전함.
- 이는 6년 만에 53배로 늘어난 수치로 올해 역시 4월까지 870명의 탈북자가 태국에서 체포된 상태라고 RFA는 덧붙였다.
- 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조선난민구호기금 관계자는 "극심한 식량난과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해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2. 대외정세

가. 일반

● 濠외무, 중국의 북한 감싸기 중단 촉구(5/4, 자유아시아방송(RFA))

- 케빈 러드 호주 외무장관이 중국에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북한 감



- 싸기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러드 장관은 3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아시아의 부상, 국제협력과 미국 외교정책' 제하의 토론회에서 북한을 국제사회 '분쟁의 불씨(tinderbox)'로 규정한 뒤 중국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킨 북한과 관계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전함.
- 또한 호주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대북 개발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드 장관은 최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 식량실태조사단에 호주 관리 2명이 참가했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검증된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 60년 만에 고향땅으로 돌아간 영국군 유해(5/4, 조선중앙통신)

-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북녘 땅에서 숨진 영국군 비행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고향땅으로 돌아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영국군 비행사 데스몬트 프레드릭 윌리엄 힌톤의 유해가 4일 판문점을 통해 영국 측에 송환됐다"고 밝힘.
- 또한 힌톤씨의 유골이라도 찾고 싶다는 고인의 동생의 요청에 따라 영국정부가 2002년 북한 당국에 유해발굴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유해를 찾아 나섰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유족은 올해 3월 힌톤씨의 유해를 고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북한 내 영국대사관과 협의한 끝에 유해와 유품을 발굴해 유족에게 넘겨줬으며, 이처럼 영국군의 유해가 고향에 돌아간 것은 1995년 육군 이등병의 유해가 송환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함.
- 또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앞으로도 지난 조선전쟁이 남긴 상처를 가시게 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인 유해 발굴 송환에 적극 협력해 나갈 입장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카터 "北, 식량 모니터링 '문제없을 것' 밝혀"(5/5, 연합뉴스)

-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카터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방북 보고서를 통해 방북시 만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분배에 관한 미국의 모니터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그는 박 외무상이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 비핵화 관련 공동성명의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그러나 박 외무상은 북한이 적대적인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 북한이 핵무기들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역내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스스로 핵 보호력을 갖고 있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



에 있다며 주장

- 또한 카터 전 대통령은 박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서면 요구도 전달했다고 밝힘.
- 하지만 다음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용수씨 석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김영남은 카터 일행에게 놀랄 만큼 부정적이고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전함.
- 이와 함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카터 일행과의 면담에서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들을 북한이 이행할 뜻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 밖에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만난 북한 군부의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도 한국과 전제조건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북측은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유해 발굴에 대한 협력 방안도 제안했다고 보도

● ITU "北에 해킹 중단 촉구 가능"(5/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에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
-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도 IT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밝힘.
- RFA는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해 "북한의 컴퓨터 공격을 처벌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국제기구나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의 컴퓨터 공격에 대항해 대책을 세우는 국제기구인 '사이버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다중협력기구'(IMPACT)도 디도스를 비롯한 북한의 컴퓨터 공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 전IAEA 사무차장 "北, 리비아에 핵물질 수출"(5/7, 미국의소리(VOA))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2004년 리비아에서 발견된 핵물질은 북한이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하이노넨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리비아에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육불화 우라늄(UF6)이 발견됐는데 이때의 기계장비와 북한의 핵개발용 부품 구매 행태, 파키스탄이 제공한 정보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만든 육불화 우라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연계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파괴한 시리아의 원자로가 북한의 원자로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고 이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답함.



- 하이노넨 전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농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IAEA 사찰단이 방북하면 반드시 이들 시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그는 북한이 지난해 방북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IAEA 사찰단 복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사찰단 초청을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찰단 복귀가 아니라 사찰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냐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영변의 원심분리기를 한 번 보고 돌아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

● '재스민혁명' 때문에 발 묶인 北해외주재원들(5/8,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해외 주재원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재스민 혁명' 여파로 당분간 귀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반(反)카다피 시위가 벌어진 리비아에 있는 주재원들에게 귀국 불가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집트 등 다른 국가 주재원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화 바람이 북한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도 최근 소식지에서 "(북한) 중앙당이 해외대표부에 현시기 조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렸다"며 "국내출장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국내 출장을 오더라도 조용히 일만 보고 나갈 것을 권유했다"고 전함.
- 실제로 리비아에서는 친카다피 세력과 반카다피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 북한인 200여 명이 오도 가도 못 한 채 현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예멘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예멘에는 약 150명의 북한근로자가 건설과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도 사나에는 예멘 사람들을 상대로 한방과 물리치료를 하는 북한 의사와 간호사 6~7명이 머물고 있다"고 전함.
-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재원의 상당수는 건설 근로자들인데 이집트나 리비아 등에서는 건설공사까지 중단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연합뉴스는 추정



■ 기타 (대외 일반)

- 이스라엘의 反팔레스티나 군사적 공격 관련 "중동사태는 미국의 지지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反팔레스티나정책, 영토팽창책동에 의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 傳言(5/2, 중통·노동신문)
- 美國의 '일방적·패권주의 정책'으로 "美-러의 전략적 대립과 마찰(NATO 확대강화, 유럽MD 문제, 잭슨-바니크법 등) 심화" 轉言(5/3, 중통·민주조선)
- EU-北사이 관계발전(대사급 외교관계 수립(2001.5.14) 등)을 "세계의 다극화 실현, 東北亞평화안정에 긍정적 기여"로 평가하며 "우호적인 세계 각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강조(5/3, 중통·민주조선)
- 미국의 태평양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등 군사적 움직임은 "北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淸조산반도와 亞-太지역의 군사적 지배권 확립 기도"라고 주장(5/4, 중통·민주조선)
- 미군의 이라크 주둔 8년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파괴, 무질서와 불안정, 인권유린 등 악과 재난뿐"이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은 곧 망국, 죽음"이라고 再次선동(5/4, 중통·노동신문·중방)
-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對中비난 발언(3월)에 대한 미국의 友好적 입장표명 관련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 행위,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看參및 경제 분야에서도 兩國의 "대립과 모순" 轉言(5/4, 중통·민주조선)

3. 대남정세

● '농협 해킹' 北정찰총국은 공작 총괄기구(5/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 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정찰총국)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고 보도
- 검찰이 농협 해킹의 주범으로 판단한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군부의 권력기구로 '대남통' 김영철(65) 상장이 총국장을 맡고 있다고 뉴스는 보도
- 이어 올해 초부터는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정찰총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영철 총국장은 김정은의 핵심측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함.
- 또한 뉴스는 정찰총국은 지난해 3월 터진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도 지목된 기관으로 2009년 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2인조 간첩의 암살 시도도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으며, 작년 7월7일과 올해 3월4일 청와대와 포털사이트 등 국내 주요기관을 상대로 이뤄진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도 정찰총



국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함.

● **조계종 방북단 금강산 방문..구호품 전달(5/4, 연합뉴스)**

- 국내 최대 불교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방북단이 부처님 오신 날(5월10일)을 앞두고 4일 오전 방북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 10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발, 오전 11시1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뉴스는 전함.
- 방북단은 당초 계획했던 남북공동법회는 정부 당국이 불허함에 따라 열지 않기로 했으며, 이날 공동법회를 여는 대신 신계사 대웅전 등 법당을 참배했다고 전함.
- 이어 방북단은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육로로 귀환한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적십자접촉 무산..침묵하는 北(5/5, 연합뉴스)**

- 귀순자 송환 문제를 비롯해 백두산 화산과 동해 표기 등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던 북한이 열흘 이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특히 정부가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귀순자 4명 문제와 함께 국군 포로·납북자 등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지난달 27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보도
-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어간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우리가 납북자 등의 의제를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함.
- 무엇보다도 현재 남은 의제는 백두산 화산과 동해 표기 문제로 정부는 백두산 화산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5월 11~13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열자고 지난달 28일 제의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라는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피해 민간 차원의 대화 소재를 적극 발굴하며 접촉면을 넓혀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이는 북한이 본격적인 대화국면 진입에 앞서 대남 전략기조 전반을 재점검해보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북한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문제 특별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전략적 대응기조를 잡고, 이어 나머지 '비정치적 대화'들에 관한 대응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연합뉴스는 예상
- 특히 4·27 재보선에서 패한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남북관계 측면에서 유연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카터 전 대통령 방북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약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카드가 유효해질 수 있다는 관측

- 이와 관련해 대통령 특사로 오는 8~14일 유럽 3개국을 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통일의 성지인 베를린에서 중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는 보도

● 北조평통, 南 인권거론에 "징벌할 것"(5/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남한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이어 그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핵참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반통일 집단으로서 정체만 더욱 드러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 北 "연평도 포격 재현"...南사격훈련 비난(5/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3일 이뤄진 남측 해병대의 서북도서 지역 해상사격훈련을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왜 재현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해 북남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했던 연평도 포격사건이 아직도 민족의 가슴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남조선 괴뢰들이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포격훈련을 재현하고 있는 사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중앙통신은 "특대형 모략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낸 반공화국 도발사건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엄청난 후과(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남조선괴뢰들은 서해해상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여놓고 도발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비난
- 이어 "남조선 군부는 연평도 사격훈련 같은 군사적 대결소동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내외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 호전세력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불을 즐기면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위협
- 또한 북한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남쪽에 있는 수많은 산과 바다를 제쳐놓고 굳이 여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 백령도,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인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발"이라고 비난



● 개성공단 체류인원 600명대로 확대(5/8, 연합뉴스)

- 지난달 중반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하루 평균 체류인원이 600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기존 하루 500명 선에서 4월13일께부터 600명을 넘어 대략 650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 생산 활동과 관련한 인원에 대해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체류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류인원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이는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보류했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을 3월 말 재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수그러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의(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위한 상황인가가 더 중요하다 등) 對北발언은 "남북관계의 장래와 관련한南당국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對北정책 전환' 요구(4/29, 중통·평방)
- 최근 我軍의 군사훈련(서해상과 경기도 일대 합동훈련, 對테러종합훈련 등)진행 관련 "대결정책 持續추진, 북침전쟁 도발책동 박차" 등으로持續비난(4/29, 중방)
- '韓美핵확장억제수단 운영연습 실시 합의' 관련 "핵위협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군사적 실천단계로 이행했다"며 "사태는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에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 및 '전쟁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강조(5/2, 평방)
- "南당국자들은 입으로는 대화를 부르짖으며 전쟁열 고취,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며 "대결전쟁책동은 남북관계 개선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反민족적 죄악"이라고 비난(5/2, 중방)
- 지난해 '北천안함 폭침' 이후 '韓美연합해병대훈련' 예정(7월) 및 我軍의 서해상일대 훈련강화 등에 대해 "서해에서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비난(5/4, 중통·노동신문·중방)
- 統一部の 임시국회 회기內'北인권법' 통과 시도 관련 "체제통일야망은 부질없는 망상으로 절대로 목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5/4, 중통·노동신문·평방)
- 現남북관계는 "민족중시 입장과 자세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南당국의 "외세공조정책 철회 및 우리민족끼리 입장 및 자세" 요구(5/4, 중통·노동신문)
- 「조평통」대변인, 5.5 南의 '北자유주간'행사 개막 및 '北인권법' 제정움직임 관련 중통기자 질의 답변을 통해 "南민심과 사회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는 한편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달성 속심"이라고 비난(5/5, 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6자 재개 남북한에 전가"〈中매체〉(5/6)

-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미국이 진심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책임을 남북한에 전가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평화회담에 나서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분야 전문 자매지인 이 신문은 이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상하이(上海) 소재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센터 팡시우위(方秀玉) 교수의 글을 게재했음.
- 팡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은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한이 우호관계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선 상태"라며 "그러나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미관계라는 점을 미국은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이 '핵 반확산'을 빌미로 북핵문제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문제 개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은 그런 전략을 버리고 북한의 생존주권을 인정하는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통해 정치적 와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통일을 이루려는 기대를 갖고 있어 보이며 유사시 북한에 한국과 미국이 진입하려는 '5029 계획'이 바로 증거"라면서 "그런 시도는 북한을 더 긴장시켜 핵포기를 시키는 목표와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 팡 교수는 북한에도 "이미 결정된 합의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며 "대화와 담판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가장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음.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8~11일 중국·한국 방문"(5/6)

-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11일 중국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스기야마 국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문제 특별대표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21~2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애초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의 중국, 한국 방문을 검토했지만 일정을 조정할 수 없게 되자 스기야마 국장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美재무부 "北 이란에 광범위한 금융압박"(5/4)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3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압박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음.
- 코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질문에 북한 및 이란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노력들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북한과 이란에 광범위한 금융 압박을 넣는 것"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민간분야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 압박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음.
- 그는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김정일 '통치 자금'을 동결시킨 뒤 북한에 대한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어온 스튜어트 레비 전 차관의 뒤를 잇게 됨.
- 또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해 온 대니얼 클레이저 테러·금융정보 담당 부차관보는 차관보로 지명된 상태임. 클레이저 차관보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 이란, 북한과 같은 정권에 그동안 실질적인 금융 압박을 가하고 핵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물자들의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음.

● 카터 "北, 식량 모니터링 '문제없을 것' 밝혀"(5/5)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한 방문시 북측이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모니터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카터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방북 보고서를 통해 방북시 만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분배에 관한 미국의 모니터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박 외무상이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 비핵화 관련 공동성명의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침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박 외무상은 북한이 적대적인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 북한이 핵무기들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역내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스스로 핵 보호력을 갖고 있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다.
-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전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나 미·북 관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음.
- 카터 전 대통령에 따르면 킹 특사는 식량지원 모니터링이 부족한 점이 식량지원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와 관련, 킹 특사는 지원식량이 모니터링 되고 유엔 기구와 미국의 5개 NGO(비정부기구)들에 의해 각각 절반씩 식량이 분배된다면 미국은 식량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은 전했다.
-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박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 국인 전용수씨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서면 요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다음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용수씨 석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김영남은 카터 일행에게 놀랄 만큼 부정적이고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와 함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카터 일행과의 면담에서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들을 북한이 이행할 뜻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밖에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만난 북한 군부의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도 한국과 전제조건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또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유해 발굴에 대한 협력 방안도 제안했다.
-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만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평화대화 및 북한의 경제개혁 계획에 대해 놀랄 만큼 낙관적으로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다. 중·북 관계

● 北-中 라선특구 고리삼아 경험 '젠걸음'(5/4)

- 북한과 중국이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고리로 삼은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음.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내달 본격화하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교통망 추가 확충과 물류 교류 확대도 추진되고 있음.
- 훈춘시 정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말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을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3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 정부 간부들도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일각에서는 북-중 양국이 라선특구 합작개발에 적극적이라 점을 대내외에 홍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착공식을 라선특구에서 양국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훈춘은 두만강 유역의 대표적인 대북 교역 창구로, 중국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도로 보수가 마무리되면 라진항을 통한 해상 항로가 기동돼 중국 동북지역의 지하자원과 농산물의 남방 운송 길이 열리게 됨.
- 기존 훈춘-라진 도로는 거리가 53km에 불과했지만 굽은 산길을 따라 건설된 비포장도로여서 물류 운송에 걸림돌이 됐다. 중국은 지난 1월 훈춘



- 의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상하이로 시범 운송했으나 훈춘-라진 간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본격적인 운송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음.
- 훈춘-라진 도로 개통은 또 북-중이 합작하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도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보임.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향후 5년간 35억 달러를 들여 라선특구 부두와 도로, 정유시설, 가공단지 등을 합작개발하기로 합의했음.
- 이어 황철남 라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지린(吉林)성을 방문한 데 이어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같은 달 연변과 북한의 라선, 청진을 잇달아 방문, 경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근 들어 라선특구 개발을 위한 북·중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 훈춘시는 이번 착공식에서 쇠아원쯔통상구와 북한을 잇는 철교 신설 등 대북 교통망 확충 방안도 발표할 계획임.
- 훈춘시 관계자는 "쇠아원쯔는 두만강유역에서 북한과 최단거리에 있는 통상구이지만 일제가 퇴각하면서 철도를 폭파,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이 없었다"며 "쇠아원쯔를 비롯한 두만강 유역 통상구들과 북한을 잇는 다리, 도로 정비 방안과 대북 교역 확대 방안이 훈춘-라진 도로 보수 착공식에 맞춰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변주는 이미 지난해 5월 '12.5 계획(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 기간 두만강 유역의 썬허(三合)와 투먼(圖們)통상구에 북한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고 투먼-청진과 난펑(南坪)-무산 구간의 낙후한 철도를 보수하는 대북 교통 정비망 계획을 발표했다.
- 연변주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쇠아원쯔통상구와 난펑통상구를 국가급통상구로 승격, 대북 교역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도 마련했음.
- 북한도 5성급 호텔과 골프장, 현대식 대규모 시장 건설 등 라선특구를 국제 자유무역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 최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중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분기 北中교역 2배로 급증...10억 달러 육박(5/4)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급증해 전년 동기의 배로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음.
- VOA는 한국무역협회가 중국해관통계를 종합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3월 북중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인 9억7천2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분기 4억8천6백만 달러의 배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 1분기 북한의 수출액은 4억134만 달러로 작년 동기(1억2천700만 달러)보다 218%나 급증했음.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매월 100% 이상 급증세가 이어져왔음.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5억7천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3억5천900만 달러)보다 5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무역수지는 1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무역적자(2억3천300만 달러)보다



28% 준 것임.

● 北 "中관광단, 두만강·라선 등 둘러봐"(5/4)

- 중국인 관광단이 지난달 29~30일 북한의 두만강과 나선시 일대의 역사 유적 및 관광지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최근 중국관광단 성원들이 조선의 일부 지역을 참관했다"며 "이번 참관사업은 조선(북), 중국, 러시아 3국 윤환선관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통신은 "라진항을 비롯한 경제대상들도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 신화통신은 지난달 27일 훈춘산장(琿春三疆)국제여행사가 인솔하는 21명의 단체여행객이 26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출발해 무비자로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하고 4일 창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의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 카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북한의 나선지구를 방문하는 일정의 이 여행상품은 북·중·러 3국이 모두 허가한 시범사업으로 곧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임. 훈춘산장국제여행사 측은 매주 수요일에 3국 순회 무비자 여행을 진행키로 했음.

● <北TV, 中드라마 잇달아 방영>(5/6)

- 최근 북한에서 중국 TV 드라마가 잇달아 방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6일 보도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CC)TV는 최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조명하는 드라마를 연속 3차례 방영했음.
- 중국 인민지원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전사한 마오안잉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34부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0월 중국중앙(CC)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방영됐음.
- 조선중앙TV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외국영화' 코너를 통해 이소룡의 스승이자 중국의 전설적인 무술 영웅인 엽문의 일생을 다룬 홍콩 액션영화 '엽문'을 우리말 더빙으로 방영했음. 북한 TV에서 외국 오락물이 방영된 것은 극히 이례적임.
- 이어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 정부에 위장 침입한 중국 공산당 지하 조직원의 활약상을 다룬 첩보 드라마 '잠복'과 중국 항일 무장조직의 활약상을 다룬 '적후무공대(敵後武工隊)',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소재로 한 '진강 장군' 등을 잇달아 방영했음.
- 적후무장대는 이례적으로 더빙 없이 우리말 자막으로 처리해 방영됨으로써 중국 드라마 원판의 묘미를 살렸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 성도만보(成都晚報)는 북한에서 최근 방영된 중국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드라마는 2009년 중국에서도 인기몰이를 했던 첩보드라마 잠복



- 이라고 소개했음.
- 최근 북한의 최전방인 판문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던 한 장교가 안경을 쓴 중국 관광객에게 "드라마 잠복의 남자 주인공을 닮았다"며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잠복"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조선중앙TV는 2004년 5월 고전드라마 '홍루몽'을 내보냈고 문화대혁명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갈망'과 중국 영화 '따뜻한 봄(暖春)'을 방영한 적이 있지만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중국 드라마들을 잇달아 방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지난해부터 잦아진 북-중 양국 간 문화교류 차원으로 해석됨.
- 앞서 지난해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북한 피비다극단이 2개월 동안 중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원작을 가극으로 만든 북한판 '홍루몽'을 공연했음. 이어 평양예술단이 같은 해 8월부터 3개월간 전통 무용 등으로 구성된 '활짝 핀 민들레'의 중국 순회 공연에 나섰다.
- 지난해 7월에는 중국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

● 中甬甯-北칠보산 관광코스 개통(5/6)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에서 북한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됐다고 연변일보가 6일 보도했음.
- 신문은 지난달 30일 룡징시에서 룡징-칠보산 관광코스 선발대 출정식이 열렸으며 이는 이 관광코스가 정식 개통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룡징에서 싰허(三合)통상구를 거쳐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을 둘러보는 이 관광코스는 '변경(邊境)관광'으로 분류돼 비자 없이 통행증 발급만으로 여행할 수 있음. 칠보산 관광길이 열리면서 룡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기대했음.
- 북한 관광노선 다각화를 추진해온 연변주는 2008년부터 룡징-칠보산 관광코스 개통을 북한과 협의해왔음. 훈춘(琿春)에서 북한 라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순회하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룡징-칠보산 관광이 개통됨에 따라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전망임.
-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4년 만에 해제,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했음. 이에 맞춰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3월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코스와 옌지(延吉)-훈춘(琿春)-광관(防川)-라진·청진 코스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동북지구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관광코스는 아직 개통되지 않았음.
-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철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투먼에서 함경북



도 남양을 거쳐 청진과 칠보산을 둘러보는 관광철도를 운행할 계획임. 훈춘에서 라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을 둘러보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통도 추진되고 있음.

● 중단둥, 1년간 10만 명 北관광(5/6)

- 중국이 북한 단체관광을 재개한 지 1년 만에 신의주 접경인 단둥(丹東)에서 10만 명이 북한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난해 4월부터 단둥에서 북한 단체관광이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10만 명이 북한을 여행했다고 단둥에서 발행되는 압록강만보가 6일 보도했음.
- 올해 들어서도 노동절(5월 1일) 연휴를 맞아 지난달 말부터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단둥 변방수비대는 출국 절차를 간소화해 북한에 가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현지 여행사들은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드는 이달부터 북한 단체관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음. 하루 코스로 신의주 일대를 둘러보는 단둥의 북한 단체관광은 비자 없이 통행증을 발급받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다녀올 수 있음.
-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북-중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양국 당국이 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단둥에서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음.

● 중상무부 "대북투자 위험 커"(5/6)

- 중국 상무부가 민간 기업들이 대북 투자시 유념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투자지침서에서 대북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6일 지적했다.
-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별 투자협력 지침서-북한편'에서 "북한은 특수한 나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자에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음.
- 상무부는 기업인들의 해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 세계 165개국별로 투자지침서를 만들어 부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2010년 9월 작성된 북한편은 이 가운데 하나임.
- 지침서는 북한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북한을 둘러싼 환경은 외자 유치에 적합치 않다고 투자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음. 아울러 지침서는 북한의 전력·운수 시스템 낙후 등 인프라 부족과 정보 불투명성도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음.
- 지침서는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북한의 사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려는 의식도 부족해 맹목적으로 대북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측 파트너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경고했음.



- 또한 지침서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달라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낸 수익을 중국으로 가져오는 데에도 큰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음.
- 지침서는 전체적으로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왔을 때 중국과 북한 양국 정부가 비준한 사업 분야에서 주로 성공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면 기타 분야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음.
- 한편 이 지침서는 북한 투자의 장점으로 정치환경 안정, 지정학적 우수성, 양질의 노동력 등을 예로 들었음.

● "北 대중국 광물수출 8년 사이 17배 ↑"(5/7)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물자원이 2002년 약 5천만 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17배(8억6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RFA는 한국무역협회와 북한자원연구소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음.
- RF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1~3위는 모두 광물자원이 차지했음. 1위는 석탄이었고 철광석이 2위, 비합금 선철이 3위였으며 아연과 마그네시아, 동 역시 10위권에 들어 대중국 수출액 중 63%가 광물자원이었다고 RFA는 덧붙였다.
- 올해 1,4분기에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팔아 벌어들인 금액은 1억5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8만 달러보다 15배나 됐으며, 올해 3개월 동안 석탄수출액은 작년 석탄수출액(3억8천600만 달러)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라. 일·북 관계

● 北 "일본인 2명 억류, 1명 추방"(5/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마약과 위조화폐 혐의로 일본인 2명을 억류하고 1명을 추방했다고 4일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지난 3월14일 라선시에 들어온 일본인들인 전 JP다이린주식회사 대표취체역 후루야 마사키, 일본 리아라이즈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아베 히데히꼬, 일본 스기다공업주식회사 전무 히로오카 다쿠미가 마약, 위조화폐 범죄로 해당 기관에 억류됐다"며 "그들이 범죄행위와 엄중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음.
- 중앙통신은 후루야씨는 북한에서 추방됐고 나머지 2명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공화국 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그에 따르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0일 라선을 방문한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이 석방되고 2명이 구속돼 있다고 보도했음.



마. 기 타

● "WFP 식량분배 감시 北시장서도 가능"(5/3)

-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긴급식량지원 개시를 앞두고 분배 감시를 위해 상주 국제요원을 기존 10명에서 5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미국 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음.
- 방송은 WFP의 긴급식량지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상주하게 된 국제요원 59명 중 12명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며 "인력의 60% 이상을 분배현장 감시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어 "평양본부 외에 6개의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는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평양과 청진, 함흥, 해주, 혜산, 원산에 현장사무소가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WFP는 "매달 북한 내 400여개 지역에서 WFP 소속 국제요원이 현장실사를 하는 것에 북한당국과 합의했다"며 "실사에 대한 사전통고 기간은 기존 일주일에서 24시간으로 줄었고 도·군 단위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마커스 프라이어 WFP 대변인은 "이번 긴급식량지원으로 지원지역이 기존의 7개도 65개 군에서 8개도 109개 군으로 늘어났다"며 "미국의 NGO(비정부기구)들이 담당하는 평안북도와 자강도는 WFP의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음. WFP는 앞으로 12개월간 약 350만 명의 북한주민에게 31만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의 1분기 곡물·비료 수입 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가루와 옥수수를 더 수입하고 쌀과 콩의 수입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산 밀가루와 옥수수 수입은 전 년동기보다 각각 75%, 16% 늘었고 쌀과 콩은 25%, 53% 줄었음.

● WFP, 자금 부족으로 대북식량지원 지연(5/5)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긴급식량지원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했다.
- 나나 스카우 WFP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발표한 (대북 긴급) 식량배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32만t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한 곡물은 영양강화과자를 만들 8천t밖에 없는 만큼 일단 자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WFP는 지난달 29일 식량난이 심각한 양강도와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약 31만t의 곡물로 혼합식품과 영양강화과자를 만들어 1년간 북한 주민 350만 명에게 제공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스카우 대변인은 "새로운 긴급지원사업 발표가 당장 식량을 배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기금 확보를 위해 긴급지원사업의 명세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분배감시요원을 59명까지 증원키로 한 것에 대해 "현재 분배감시를 담당하는 국제요원은 12명"이라며 "요원을 59명으로 증원할 가능성



은 있지만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충원하겠느냐"고 지적했음.

- RFA는 이어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해 "WFP의 새로운 식량지원발표는 미국의 지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WFP가 지원한다는 곡물 31만t은 2008년과 2009년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려던 50만t 중 이미 지원한 17만t의 곡물을 제외한 33만t을 연상 시킨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美 교육·과학 장관급 회담...교육은 30년 만에(5/8)

- 교육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와 핵융합 등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학 장관급 회담이 열림.
- 교육과학기술부는 11~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미국 안 던컨 교육부,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 존 홀드렌 대통령 과학고문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 우선 양국 교육장관 회담으로는 30여 년 만에 성사된 던컨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공교육 강화, 우수교사 확보, 글로벌 교사 양성,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방안 등 양국의 교육 현안이 의제에 오름.
- 교과부는 "일단 공교육 강화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한국의 과학예술통합(STEAM) 교육과 미국의 이공계 교육정책(STEM)을 공동 연구하는 방안, 교사 교류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음.
- 이 장관은 스티븐 추 장관과의 회담에선 '고에너지 및 핵물리학 분야에 대한 시행약정'을 체결한 뒤 중이온가속기, 핵융합에너지를 함께 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존 홀드렌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합의된 나노·표준연구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함.
- 이 장관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을 찾아 한국연구재단(NRF)과 추진해오고 있는 '한미 과학기술특별협력사업'이나 로봇공학, 뇌공학 등에 대한 연구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이번 한미 교육·과학 장관급 회담 등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외교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하고 'Post-G20' 시대를 이끄는 교육과학기술 강국을 모토로 한 교육과학기술 외교구상을 함께 발표했다.
- 교육협력, 인력교류, 공적개발원조, 과학기술협력 등을 종합 진단한 이번 구상에는 ▲장관급 협의 신설·정례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우수교사 해외 진출 지원강화 및 진출 국가 다변화 ▲정부초청 해외 유학생,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세계적인 연구소 유치 지원 ▲



해외 과학인재의 정착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의 개선책이 담겼음.

- 이 장관은 이 같은 외교구상을 적극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한미 장관급 회담 이외에도 9~1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3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이 2017년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中, 한국에 對대만 군사교류 중단 압력"(5/4)

- 중국은, 한국-대만이 실시중인 군사 유학생 교류를 중단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대만 국방부 뤼사오허(羅紹和) 대변인이 4일 밝혔다.
- 뤼 대변인은 중국이 한-중 군사 교류를 구실로 내세우며 한-대만 군사 교류 중단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히고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대만과 교류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대만 군사 유학생 교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 군사 유학생 교환은 한국이 1992년 대만과 단교 후에도 지속해온 군사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요구한 대만 국방 관리는 한국이 이 교류를 차단하면 대만 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사태를 매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만 민진당 차이잉란(蔡煌瑯) 입법의원(국회의원)은 중국이 한-대만 군사교류 중단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2008년 취임 후 3년간 대만의 주권을 무시하고 친중국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 그는 "마잉주의 친중 정책은 중국에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무자비하게 대만을 짓밟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겨우 남은 대만의 생존 공간마저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마 총통은 3일에도 "양안 관계 개선은 우리나라의 국제무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유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한-대만 군사 교류 중단은 아시안게임 태권도 양수권(楊淑君) 선수 실격 사건, 삼성전자가 대만 LCD 기업들을 유럽연합(EU)에 밀고한 사건 등으로 지난해 촉발된 반한 감정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니어재단-칭화대, 첫 안보관련 정례회의(5/5)

-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과 중국 칭화(淸華)대학교가 첫 안보 관련 정례회의를 열 예정임. 니어재단은 오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 칭화대에서 제1차 '한중 안보전력 대화'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 니어재단과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이 회의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봄·가을 중국과 한국에서 교차로 열리게 됨.



- 니어재단은 "회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니어재단에 양국 간 안보 관련 정례회의 창립을 제안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 회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해석과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상황 전반에 걸쳐 한·중 양국 간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총 3개 세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의 미래 ▲한국과 중국 전략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것임.
- 정덕구 이사장은 "이번 회의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 사태에 대한 중국 내부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회의에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정 이사장을 비롯해 신각수 주일 대사 내정자, 이상현 외교통상부 전략기획국장, 장달중 서울대 교수,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 김홍규 성신여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박사 등 외교당국과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 중국에서는 추수룡(楚樹龍)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장과 당강(丁剛) 인민일보 기자, 리진(李軍)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 연구실 부주임 등이 참석함. 2차 회의는 오는 10월 말 제주도에서 열림.

● 한·중 국방장관 간 '핫라인' 개통 추진(5/6)

-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는 7월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중 국방장관간 '군사 핫라인'을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김관진 장관이 7월쯤 중국에 갈 것 같다"면서 "2008년 개통된 양국 해·공군 작전부대 간 '군사 핫라인'에 이어 국방장관 간 핫라인 개통을 이번 방중을 계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양국은 또 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소령급 장교들이 양국의 육·해·공군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는 상호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다만 중국이 우리 정부가 대만과 진행 중인 장교 교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양국은 지난 2008년 11월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측 평택 제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중국 측 칭다오(靑島) 북해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 우리 측 대구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측 지난(濟南)군구 공군지휘소에 직통전화를 설치했다.
-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김 장관의 방중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의제는 협의 중"이라면서 "군사 핫라인 개통이나 양국 소령급 장교 상호 연수프로그램, 대만과 장교 교환 프로그램 중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日 왜곡 교과서, 일찌감치 '채택 홍보전' 돌입>(5/8)

-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사·단체가 올여름 중학교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일찌감치 시중 판매용 교과서를 출시하는 등 서둘러 홍보전에 들어갔다.
- 일본 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등은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공민·역사 교과서를 지난달 28일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 이들 교과서에는 '시판본(市販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와 내용은 차이가 없음. 또 다른 왜곡 교과서 출판사인 이쿠호샤(育鵬社)는 웹사이트에서 "시판본은 12쪽 분량의 부록을 덧붙였을 뿐 채택용과 내용이 같다"고 밝혀놓았음.
- "일한병합(한국강제병합)은 일본의 자랑"이라는 등의 역사 왜곡 주장을 해온 새역모는 2001년과 2005년에는 '미리 교과서를 파는 것은 위법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6, 8월에 시판용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서점에 책을 뿌렸음.
- 일본 내 보수 여론을 움직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음. 검정을 통과한 다른 교과서는 이달 중 예정된 교과서 전시회를 통해 첫 선을 보임.
- 새역모는 이달 29일 도쿄 시내에서 시판용 교과서 발매 기념행사를 열고 유료 회원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주는가 하면, 교과서 채택 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매거진'을 새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홍보전을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이들 교과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미 알려진 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한층 강조한 내용이었지만,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잘못 표시하는 등 조잡한 부분도 눈에 띄었음.
- 새역모가 펴낸 '새로운 공민 교과서-시판본' 149쪽에는 울릉도와 독도(일본식 명칭은 다케시마)의 거리를 '약 92km'라고 적어놓고는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隠岐島)간의 거리는 '약 157m'라고 표기한 지도가 실려 있었음.
- 새역모는 그동안 중학교 역사교과서만 만들다가 올해 공민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에 관한 문제'라는 부분에 "일본 땅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실력으로 점거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은 지도를 끼워 넣었음.
- 독도-오키시마 거리를 '약 157m'라고 표기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울릉도-독도 거리 87.4km, 독도-오키섬 거리 157.5km')는 물론이



고, 일본 외무성의 주장('울릉도-다케시마는 약 92km, 다케시마-오키시마는 약 157km')과도 차이가 있음.

- 수치와는 달리 시각적인 이미지로는 독도-울릉도 거리를 독도-오키시마 거리보다 가깝게 그려놓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실린 지도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측됨.
- 이쿠호샤의 시판용 공민 교과서는 '일본의 영토문제(157쪽)'라는 부분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는 물론이고, 태평양에 있는 바위인 오키노토리(沖ノ島)까지 모두 자국 영토라고 표시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지도를 실어 눈길을 끌었음.

● "일본, 李대통령 방일시 조선왕실의궤 인도키로"(5/8)

- 일본이 조만간 한일도서협정 국회 비준을 끝내고 이명박 대통령 방일시 조선왕실의궤를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음.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1,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담 참석차 방일하는 이 대통령에게 조선왕실의궤를 일부나마 건네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임.
- 간 총리는 또 제1야당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에서 건너간 귀중한 도서가 한국에도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내 일본도서의 접근권을 개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일본 측은 지난달 28일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근거인 한일도서협정의 중의원(하원) 논의를 끝낸 데 이어 조만간 참의원(상원) 표결을 거쳐 협정을 비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와 전략경제대화서 날선 공방예고(5/6)

- 중국이 오는 9~10일 워싱턴에서 열릴 제3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 중국 외교부의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은 회담 개최를 사흘 앞둔 6일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과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 추이 부부장은 먼저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미국 측이 개별 인권사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중국 내 인권 발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밝혀 예상되는 미국의 인권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 이어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실적인 접근으로 좀 더 따뜻하게 보려



- 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음.
- 그의 이런 발언은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이 반체제 설치미술가인 아이 웨이웨이(艾未未),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구금 등의 개별 인권사안을 들이대면서 공격할 것을 예상한 예봉꺾기 시도로 보임. 최근 미 관리들도 회담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개별적인 인권 탄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중 양국은 지난달 27~28일 미중 인권대화를 베이징에서 열었으나, 양국의 입장차이 만을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했음.
 - 인권대화에서 미 측은 중동과 아프리카 대격변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중국에서도 '재스민 시위' 시도가 있었으나 중국 당국이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블로거 등을 대거 잡아들이는 인권탄압을 저질렀다고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중국 측은 구금된 인사들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라며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사법주권 침해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위안화 문제와 관련, "미중 양측이 위안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환율 절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미국은 후자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주 부부장은 "위안화 환율 결정은 중국의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최근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이 중국에서의 미국 기업 투자 규제를 언급한데 대해 "중국 기업들이 미 시장에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많다는 불만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음.
 - 워싱턴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미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공동대표로 참석함.
 -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작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2차 회의가 열렸고 이번이 세 번째임.

● 미중전략경제대화 中 대표단, 베이징 출발(5/8)

-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9~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의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8일 오후 출국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 다이 국무위원은 전략대화 분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왕 부총리는 경제대화 분야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각각 공동 의장을 맡게 됨.



마. 미·일 관계

● 〈美, 오키나와 주일미군 괌 이전비 분식〉(5/4)

- 미국이 오키나와(沖縄)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을 분식해 일본의 부담률을 낮게 위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보도했음.
-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일 미국 대사관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8년 12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을 위한 '괌 이전협정' 협상의 잠정 타결을 전문(電文)으로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그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음.
- 이 비밀전문에 의하면 2006년 봄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로드맵(일정표) 작성시 미측은 실제 필요치 않은 군용도로 건설비 10억 달러를 이전 비용에 포함했음. 이는 미군의 이전 비용 총액을 늘려 일본 측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이를 수용했음.
- 이에 따라 애초 92억 달러였던 이전비용 총액은 102억 달러로 늘어났고 일본의 부담률은 금액 자체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66%에서 59%로 떨어졌음.
- 2006년 당시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비 부담비율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했으며 미국이 자체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을 부풀려 일본의 부담 비율을 낮췄음. 하지만 현재까지 군용도로 건설을 포함해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은 실행되지 않고 있음.
- 전문은 이전 대상 해병대의 병력 수와 관련 "일본에서 정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수보다 늘렸다"고 기술했음.
- 미국은 일본에 오키나와 해병대 1만8천명 가운데 8천명을 이전하겠다고 공식 설명했지만 전문에서는 "실제 해병대는 1만3천명 수준"이라고 보고해, 이전할 실제 병력수가 8천명을 밑돌 것임을 시사했음.
- 이 보도는 아사히신문이 위키리크스로부터 일본과 관련된 외교전문 7천점을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 것임.
- 미국은 일본의 재해대책에 대해 관료들의 부처이기주의와 눈앞의 위험만 피하고 보자는 풍조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일 미 대사관은 2008년 3월 18일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일본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은 상황에서 일본에서 파멸적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 전문은 또 "일본의 관료제와 계획시스템은 유연성을 잃고 있고,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위협에 약점을 갖고 있어, 유사시 중대 시스템과 서비스의 장기간에 걸친 상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의 외교·국방 관련 고위공무원들은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당시 미국 관료들에게 외교·국방에서 일본의 새정권에 양보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 등 어느 나라 외교관인지 불분명한 행태도 드러났음.
- 2009년 9월 18일 당시 일본 외무성의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아시



- 아·대양주 국장은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에게 미일 대등외교를 주창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외교정책과 관련 "이미 대등한 외교인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관료를 압박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대담한 외교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자국 정부를 "명청하다"고 비판했음.
- 당시 외무차관도 캠벨 차관보에게 "국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있어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음.
 - 또 다카미자와 시게노부(高見澤將林)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수용할 수 있는 미군 재편 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찍 유연성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음.
 - 하토야마 당시 총리는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밖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 측에 "마땅한 대체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나고(名護)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존안을 고수 하겠다"고 약속했고, "오키나와 현외 이전 검토는 형식적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당시 연립을 구성하고 있던 사민당이 오키나와 현 내 이전에 반대할 경우 "연립 해소도 불사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사실도 폭로됐음.

● "美, 日 핵 밀약 조사 강하게 우려"(5/8)

-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미-일간 핵무기 반입 밀약' 조사를 두고 미국이 강하게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번에 공개된 전문은 2009년 11월27일 자로 제임스 줌월트(James P. Zumwalt) 주일 미국대사관 수석공사와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의 대화 내용을 기록했음.
- 전문에 따르면 줌월트 수석공사는 "(일본에 기항하는) 미국 함정이 핵무기를 싣고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놔두는 것은 (미국) 핵억제 전략의 중요한 요소"라며 "(핵 탑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의 국익에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음.
- 미일 양국은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미군의 핵무기 일본 반입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비밀 의사록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핵무기를 들여올 수 있다고 약속했음. 2009년 9월에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이 같은 밀약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측이 '한국 등 주변국의 국익'을 거론하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대해 우메모토 외무성 북미국장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보다 고민스러운 문제"라며 "현 정권(하토야마 정권)은 (핵 밀약) 조사가 불려올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 핵의 일본 반입,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사전 협의대상 제외, 오키나와 반환 때 원상회복비의 일본 부담 등에 대해 미국과 밀약을 맺었다고 인정했음.

바. 중 · 일 관계

● 시진핑, 日과 관계강화 잇따라 강조(5/6)

-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중 일 관계 강화 의지를 잇 따라 밝혔음.
- 시 부주석은 5일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비정부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방중 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접견하고서 "중일 관계를 강화하기위해 양국민의 접촉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음.
- 시 부주석은 "양국민의 접촉은 우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더러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일본을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이어 "일본과의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로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공통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시 부주석은 4일 방중한 일중우호연맹 대표단을 만난 데서도 "양국 국민감정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양국 간) 민감한 문제를 타협해 처리하자"고 말해 관심을 끌었음.
- 시 부주석이 이처럼 일본에 관계강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지난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갈등과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한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잇단 재난 극복 과정에서 중일 관계가 회복조짐을 보여 왔다고 보고 있음.

사. 일 · 러 관계

● 러 휴양소, 재난 피해 日 어린이 500명 초청(5/6)

- 러시아가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본 지원에 지속적 열성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 극동 지역 휴양소가 오는 6월과 7월 재난을 당한 일본 어린이 500명을 받아들여 쉬게 할 예정이라고 겐나디 오니센코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청장이 5일 밝혔음.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오니센코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해주의 '오케안(해양)' 어린이 휴양소가 일본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6월에 250명, 7월에 250명이 올 것"이라고 말했음.
-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오케안 휴양소는 또 국제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어린이 120명과 인도, 북한 출신 어린이들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대신 상당수의 러시아 어린이들이 중국으로 가 여름을 즐기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음.

- 오니센코 청장은 그러면서 "러시아 음식에 익숙지 않은 아시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휴양소로 특별 초청된 요리사들이 일본과 중국 음식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3월 중순 러시아 휴양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일본 이재민들을 받아들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음.
- 지난해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일본과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겪었던 러시아는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구조대와 구호물자를 급파하고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음.

아. 기 타

● "中, 올해 해양감시전력 확충 주력"〈中매체〉(5/2)

- 중국 당국이 해양 감시선과 감시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음.
-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일 중국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해양경찰 인원을 1천명 이상 늘리고, 향후 5년 내에 36척의 감시선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관할 국가해양국 산하 중국해감총대(中國海監總隊)의 쑨수셴(孫書賢) 상무부총대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해감총대는 우리나라의 해양경찰 격임.
- 쑨 부총대장은 "현재 해양감시 전력은 1천t 이상의 선박 30척을 포함해 감시선 300척, 항공기 10대, 헬리콥터 4대를 보유한 수준"이라고 확인했음.
- 그는 이어 "인력 1천명이 증원되면 전체 해양감시인력은 적어도 1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해양에서의 법집행 능력 강화 차원에서 새 장비들이 감시함대에 장착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지난해에도 12척의 감시선이 증원됐고, 하이난다오(海南島)의 하이크우에 해감총대의 제10분대와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등을 위한 법집행사무소를 설립했다"고 확인했음.
- 또 "남중국해의 순찰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10월 항해거리 5천 해리 수준의 초고속 '중국 해양감시 75호'가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 중국해감총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영해에서 해양감시 차원에서 1천68회 항공기 출격과 1만3천337회의 해양 순찰활동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1천379건의 해양불법 활동이 적발됐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 쑨 부총대장은 "지난해 황해(서해)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해감총대의 활동도 2009년과 비교할 때 부쩍 늘었으며 중국의 해양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전력 증강의 이유를 밝혔음.



- 그러나 중국의 이런 해양감시 전력증강은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의 갈등이 여전하고 남중국해에서의 동남아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임.
- 특히 지난달 난사군도 부근에서 필리핀의 석유 탐사선과 중국 순찰함 간에 마찰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필리핀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난사군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가 하면 자국 해양감시전력을 증강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달 27~30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분쟁 관련국들과 남중국해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韓中日, 원전 정기 협의키로"(5/8)

- 한국과 중국, 일본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에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음.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21,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제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문제가 된 방사성 물질 확산 정보를 공유하거나 재해시 협력 틀을 구축하자는 게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3국의 원자력 관계 당국 간에 환경 감시(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거나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